+

'광주공항 국제선 재추진' 지역사회 찬반 갈등 양상

"보여주기 행정" vs "정치적 비판" 대립 정책 실효성 논의 넘어 '정치 해석' 비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을 놓고 지역사회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며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국제선 임시취항 실효성 논쟁이 정 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불 필요한 대립 구도로 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16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을 '보여주기 행정'이라 고 비판한 것은 시민 불편과 지역 관광업계 피해 를 외면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회의는 "12·20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권이 수개월째 차단되고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은 당연한 책무"라며 "오히려 박의원 개인의 정치 적 상황을 의식한 과도한 공세 아니냐는 시민들 의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회의는 "국토부 불허 이후 재시도조 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지방정 부의 책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무안군과의 신뢰 훼손' 주장에 대해 시민회의는 "국제선 임시취항은 군공항 이전과 는 별개의 사안이며 광주·전남 공동 이익에 부 합하는 조치"라며 "임시취항을 갈등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통합공 항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에 대해 "정책의 진정성과 실 효성을 모두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불허' 입장을 이미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근본적 여건 변화 없이 같은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TF 가동을 앞둔 시점에서의 임시취항 추진은 전남 도와 무안군과의 신뢰를 흔드는 조급한 판단"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시취항 추진은 시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합공항 이전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 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 니라 무안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 의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 문 제는 지역사회 내 찬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시안이 아니라 무안공항 정상화, 군공항이전,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다층 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내 찬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논의보다 정치적 확대 해석이 앞서는 구도로 흐르면서 실직적인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 관련 정책적 판단을 둘러싼 논의가 충분 히 이뤄지기도 전에 정치적 해석이 앞서 불필요 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안공항 폐쇄 장 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가 우선"이라 고 지적했다. /변은진기자



"광주시민체전 선수단 파이팅"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광주시민체육대회가 지난 15일 오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

수돗물 사용량 급증 건축주 부과 정당 관련소송 3건 승소 11억 환급위기 해소

광주시가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한 건축주에 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건축주 부담을 인정한 전국 첫 사례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 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 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 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 돗물 사용량이 급증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그동안 법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최초로 시 행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

이번 사례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으로부터 수 십년이 지난 후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이 급증한 경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 게 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초 사업 시행자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 축주도 실질적인 원인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개발 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를 인정한다"면서도 "상 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까지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고 판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재개발조합이 사업 지구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 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에 따 른 개발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 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도 받아냈다.

이로써 상수도사업본부는 3건의 원인자부담 금 소송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의 원인자부담금 환급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 소송 2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비

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감한 예 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에 투자해 시민들 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대상 최다 입상

전남도는 16일 "제1회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완도군을 비롯해 8개 지자체가수상하며 전국 최다 입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대상'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 대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4개 지자체 를 최종 선정,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 라자(DDP)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회는 우수 기금사업 추진과 답례품 운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총 5개부문을 시상했다.

전남에선 대상을 받은 완도군을 비롯해 금상 담양군·영암군, 은상 전남도·고흥군·곡성군· 해남군, 특별상 진도군 등 총 8개 지자체가 본상 을 받으며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재정기자



김동찬 前 시의회 의장 출판기념회 '성황'

북구청장 도전…"지속가능 도시 만들것"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김동찬 전 광주 시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 이 벤트홀에서 '김동찬의 출발' 출판기념회를 개 최했다. 〈사진〉

출판기념회에는 국회의원, 청년·소상공인 대 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큰 광주와 북구를 만들겠 표, 지역 경제·노동계 및 종교계 인사, 시민, 지 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지자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저서 '출발'은 김전 의장이 수년 간 광주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언서다.

김동찬 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책 제목인 '출발'은 단순한 시작을 넘어 초심으로 돌아가 시 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큰 광주와 북구를 만들겠 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